

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(정기) 계획(안)

일시	2017. 4. 10. (월) 19:36 - 22:10	장소	협회 사무실
주관	회의간사 김진성	서기	회의간사 김진성
회의장 출석	김은아, 임광섭, 박종연, 김진성, 이철환, 문찬일, 심성보, 이상민		
사전 의견제출	오동석, 김문규, 홍원기, 김병규	기타 배석	

※ 사전에 충분한 내용 숙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, 안건제출시한까지 회의 간사에게 안건제목 및 내용(필요시 별첨 자료화)을 정리하여 전달해주세요. (회의일자 3일전까지)

1. 경과보고

- 4.7 국회 역사정책 토론회 참여

=> 기록정책포럼(3월) 발표 내용 및 운영위 논의내용등을 정리하여 일부 소개함

*협회 공식입장으로 소개되지는 않음

2. 보고·공유 안건 설명 및 논의

① 대통령기록 지정권한 위임 관련 헌법소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

■ 녹색당, 정보공개센터에서 헌법소원 제기

■ 관련하여 한국기록학회는 “지정권한 위임에 대한 국가기록원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서” 제출 예정

=> 협회도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하기로 함

② 김영진 의원 발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유

■ 주요 내용

-탄핵, 사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지정기록물 지정 및 해제 권한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행사

-탄핵, 사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동결조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행사

③ 제9차 심의위원회(온라인) 결과

■ 제9차 온라인 심의위원회 진행(4.5~7)

- 심의위원장 선출(김장환), 회원가입 승인(정회원, 학생회원, 정회원 전환), 교육청
분과 설립 승인

=> 교육청 분과 대표 이창순, 간사 박형호

- 교육청 분과 대표는 앞으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

④ 대통령기록이관 관련 국가기록원장 면담 요청(국가기록원)

■ 다음 주중 4/17~21 대통령기록 이관 관련 국가기록원(장)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음

- 협회의 대응 방향 및 참석자 검토

=> 대통령기록 이관 등에 대해 기본적인 기존 입장 표명; 협회 주요이력·사명문 등을
자료화하여 지참 ; 협회장, 운영위원장, 운영위원 1

⑤ 기록인대회 준비 및 실행 관련

■ 별첨 자료 1 참조

=> 정식 조직위 구성 및 회의 추진 필요, 우선 박종연, 심성보, 문찬일 논의 시작

⑥ 기록정책포럼(5월) 기획안

■ 별첨 자료 2 참조

=> 수정안 참조

3. 주요 이슈 상황 공유 및 논의

■ 협회 3차 논평 준비

- 대통령기록 이관 시작(4/20) 이전 이관과 관련한 협회 입장 재확인

(1) 대통령기록의 동결 후 이관 입장 재확인

- 대통령기록 이관 시작 이전에 동결에 대한 입장 재확인

(2) 대통령기록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입장 요청

- 박근혜 수첩 및 안종범 수첩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

(3) 대통령기록의 폐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및 국가기록원의 입장 확인

- 청와대 문서세단기 및 윤창중 사건 기록의 폐기 의혹

(<http://www.gobal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557>)

(4) 향교안 권한대행의 기록이관 방안 등에 대한 방법 문의

=>목표 : 4.13(목) 또는 4.17(월) 발표

4. 기타 안건 논의

- 제5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홍보 요청 D-80
- 사업팀 모집 진행 ~ 4/28까지

※제4차 회의(정기) 일정

일시 : 5.15(월) 19:30 장소 : 협회 사무실

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인수인계 회의 결과 보고(안)

- 일시 : 2017년 4월 7일(금) 12:00~14:00
- 장소 :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
- 참석자 : 한국기록학회 이소연 회장, 조민지 총무이사, 공민은 간사
한국기록관리학회 이해영 회장, 김종애 총무이사, 정윤화 간사
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운영위원장, 심정보 운영위원

- 주요 결과 :
 - 제8회 기록인대회 결과 공유
 - 정산 결과 공유 : 잔액 11,111,452원(12월 10일 현재)
 - 제8회 기록인대회가 성공적이었으며, 특히 운영방식의 변화가 주요성공요인이었음에 공감
 - 제7회 대회까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가 주관하였으나, 제8회 대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동 주관함. (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개최장소 관련 공동주관)
 - 제7회 대회까지는 주최기관별로 세션을 운영하였으나, 제8회 대회는 기획소위원회 및 실행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됨
 - 제9회 대회를 포함한 향후 운영방향
 - 참석자는 아래 2항에 대하여 합의하고, 각각의 조직별 합의를 구하기로 함.
 - (1항) 한국기록관리학회, 한국기록학회, 한국기록전문가협회 3단체가 공동주관함
 - (2항)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계속해서 책임주관함
 -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최근 논의 흐름상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, 한국기록관리학회는 4월 29일 이사회까지 진행하기로 함
 - 제9회 대회를 위한 인수인계
 - (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) 한국기록학회에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고유번호증, 예금통장 등 서류 일체를 인계하였으며, 예금통장인감은 추후 별도로 인계하기로 하였음
 - 향후 일정
 - (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)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제9회 대회를 계획하여 회의를 추진하기로 함. 끝.

기록정책포럼(5월) 기획(안)-한국기록전문가협회

기획안 목표 : 기록정책포럼의 형식적·내용적 준비를 협업하여 협회(원) 역량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널리 전파함

1. 관련 배경 및 경과

-누적되어온 현행 공공기록관리계의 한계점과 굴절된 제도적·내용적 혁신과 발전
(법제도, 기록관리기관의 형태와 위상, 세부업무기능과 수행방식,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)
-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면개정 이후 축적된 개정 수요
(법령 개정=>제도 변화=> 내용 발전 : 보장은 아니지만 기반적인 의미에서 필수)
-2016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정국 변화기
(2017년 5월 대선 => 5월 중 새정부 기본구성 예정)

-한국기록학회는 2017년 상반기 월례발표회를,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의 공동 주최하는 '기록정보포럼'으로 제안하였고 협회도 동의함 (17년 2월)

-17년 3월 : 기록관리 프레임의 새로운 설계

- 국정거버넌스의 거시적 기록화를 위한 대통령기록 생산관리: 이상민(협회)
- 국민과 여론이 지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의 새모습: 심성보(협회)
- 제1기록관, 제2기록관의 가능성: 기능, 조직, 법률: 오항녕(전주대)
- 차기 정부의 역사·기록분야 조직개편 방향: 박건홍(한남대)

-17년 4월 : 정책 아이디어의 공유

- 국가 기록관리 기구(안) 비교: 조민지 (한국외대)
- 공공기록의 처분동결 가능성 탐구: 현문수 (명지대)
- 기업의 투명·책임을 위한 기업기록관리의 역할: 오명진 (한국외대)
- 국가와 국민의 다양한 기억과 기록을 통한 사회거버넌스: 이정연(한국외대)

2. 일정 및 장소

운영위 논의 (3.31, 제2차 회의)

- 당초 예정된 5월 13일(토)보다 20일(토)이 충실한 준비 및 효과 극대화에 유리
- 장소 역시 덕성여대 평생교육원보다, 더 넓은 장소가 효과적임

한국기록학회 (4.8, 포럼(2차) 뒤풀이)

- 사전에 정해진 일자와 장소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애매함

김진성 별도 의견

- 기록정책포럼은 양 단체가 주최하는 '정책안을 주제로 한 공개논의장' 정도로 기획·실행하는 편이 효과적임
- 일반적인 월례발표회처럼 개인의 학술성적을 설명·주장하기 보다, 기록공동체에 발표주제별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

-일시 : 5월 13일(토) 14:00~17:30

-장소 :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평생교육관 406호 (80인 규모)

3. 추진 내용(안)

- 발표자 및 사회자 : 운영위원들이 발표주제별로 직접 발표 또는 섭외하여 구성
- 주제 : 기록물관리기관 재직 기록전문가 입장에서의 제도적·기능적 개선 구상과 국가기록관리 정책 변화로의 연계
- 세부 발표주제 후보

① 공공기록관리 체계의 재구성 -기록관 체제의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

② 모기관 유형별 기록물관리기관의 구성·운영 발전방안 (준비가능한 유형만)

- 헌법기관 : 국회(의원), (대)법원, 헌법재판소, 선관위, 대통령, 국무총리
- 중앙행정기관 : 대통령비서실, 기획재정부, 교육부... + 일부 소속기관(특별지방행정기관)
- 지방자치단체 : 광역자치단체 + 소속기관, 기초자치단체 + 소속기관
- 정부산하 공공기관 :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
-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: 지방공기업, 지자체 투자·출자·출연기관

-교육행정기관 : 교육청, 교육지원청

-각급 학교 : 교육기본법 제9조 및 개별법에 근거한 유치원, 초중등학교, 대학교

-특별법인 : 위 구분에 속하지 않으며 개별 특별법에 의한 설립·운영되는 기관

-군 기관 :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

-민간위탁운영기관 : 공공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기관

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재편 및 권위 강화 방향

④개별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확장 및 업무 강화 방향

⑤기록물, 공개정보, 문서, 행정정보의 정의 및 범위 재확정 문제

-관련 법규와의 관할 조정 및 업무기능 재편의 근거

⑥기록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및 재설계

-RM + AM + a

-기록관 + 영구기록물관리기관 => 기록관리기관

⑦기록관리 세부업무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

-기록생산통제 강화 (예:전자적 생산 원칙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)

-기록관리기준의 세분화 및 실행방안

-보존기간 단순화 (예:한시기록/보존기록)

-분류체계 다변화

-처리과에서의 수시 정리 및 이관 실행방안

-폐기를 위한 평가는 그만하자

-공개재분류와 평가를 동시에 수행해야 효과적 : 기준 설정 후 내용을 확인하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프로세스임, 기준의 세부항목이 달라질 뿐

-공개재분류와 평가 업무에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필요

(민주주의와 민관협치 확장에 부합 / 일자리 확대와 대국민 설명의 수단)

⑧공직분야 기록전문직의 직업 안정성 확보와 성과관리(업무평가) 개선 대안

⑨공직분야 기록전문직의 입직, 재직 제도 개선안 (채용방법 다변화, 인사발령 및 인사교류 범위, 휴직 및 대체직 문제 등)

5. 향후 진행일정

-운영위원회 안건 논의 및 보완 : 4월 13일(목)까지

-발표자 및 사회자 후보에게 회람 의뢰 및 보완사항 공유

-발표주제 및 발표자, 사회자 선정 (최종 기획안) : 4월 18일(화)까지

*행사 공지 실시

-발표문 작성 및 내용 공유 : 5월 10일(수)까지

2017년 3월 기록관리 주요이슈 현황 보고(안)

작성일	2017.4.10. 19:30	작성자	심성보
목적	- 운영위 보고 및 논의 - 운영위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(필요시) 공표		

1.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이관

□ 경과

- 3.10. 파면 선고 및 선고 1시간 후 협회 논평 발표
- 3.10. 대통령기록관, “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및 기관 방문 일정 안내” 시행
- 3.13. 대기관, “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및 유출 금지 등 준수 안내” 시행
- 3.13. 대기관, “대통령기록관, ‘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’ 보도자료 배포
- 3.15. 국가기록원, “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 철저 요청” 시행
- 3.22. 협회, 제2차 논평 발표
- 3.23. 이재정의원실, 비공개 간담회
- 3.24.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, 국가기록원장 출석
- 3.29. 국기원, “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논평(3.22)에 대한 답변” 시행

□ 쟁점

-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기록관리가 부실했던 점 : 특히, 대통령기록물 정의, 범위
- 대통령권한대행의 유출, 파기, 훼손 등 불법적 행위 감독 촉구
- 이관 여부 : 이관해야 하나? 봉인해야 하나?
-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가능 여부 및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정권한 보유 여부
-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에 대한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의 태도
-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대한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의 감시 및 감독 촉구

- 국가기록원에 의한 ‘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’ 촉구
-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
- 향후 협회 추진방향
 - (입장(안)) 미생산, 유출/폐기 등을 중심으로 하고 이관 매뉴얼 주요 문제점 등을 포괄하여

4.20. 이관 개시 이전에 철저한 이관 촉구

- 주 1회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논평 발표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카드뉴스 발행

2. [법령 및 제도/정책 모니터링] 외부 전자기록물 저장시설 법제화

- 경과
 - 15.10.7. 정부 제안
 - 15.8.17. 협회, “육속즉부달을 경계한다” 제하의 반대 논평 발표
 - 15.8.19. 기록학회, 반대 의견서 제출
 - 15.8.27. 기록관리학회, 반대 의견서 제출
 - 16.5.29. 임기만료 폐기
 - 16.12.30. 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
 - 17.3.17. 협회,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물 게재 및 안행위 소속 의원에게 반대 의사 전달

□ 향후 협회 추진방향

- (입장(안)) 국회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추어 반대 의사 전달 및 필요시 추가 행동

3. [법령 및 제도/정책 모니터링] 기타

□ 현황

- 4.10. 대통령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

4. 기타 사안

□ 대상

- 새 정부 기록관리 정책 제안

- 4.7. 국회, 역사정책 토론회

- 국기원, “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” 개시

-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일단, 이 버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죄송합니다.